
「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」 2025년도 시행계획

2025. 4.

대한민국 정부



목 차



I. 개 요 1

- 1. 관련 규정 1
- 2. 수립 경과 3

II.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4

- 1. 주요 성과 4
- 2. 한계 7

III. 2025년 정책 추진방향 8

IV. 2025년 중점 추진과제 10

- 1.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0
 - 1-1.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10
 - 1-2.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11
 - 1-3.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12
 - 1-4.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 13
- 2.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14
 - 2-1.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14
 - 2-2. 호혜적·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16
 - 2-3.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18
 - 2-4.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19

3.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	20
3-1.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	20
3-2.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	22
3-3.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	23
3-4.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	25
3-5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	26
4.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	28
4-1. 정보분석 역량 강화	28
4-2.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	29
4-3. 북한 정보·정책 네트워크 정비	30
4-4.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	31
5. 국민,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	32
5-1.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	32
5-2.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·제도 마련	33
5-3.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·균형적 이해 제고	35
5-4.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·대북정책 공감대 형성	37
5-5.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	39

V. 추진체계 및 소요자원 41

1. 추진 체계	41
2. 소요 자원	42

붙임 1. 202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내역	43
붙임 2. 과제별 소관 부처(청) 현황	44

-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「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」*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(「남북관계발전법」 제13조 제4항)

* 「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

-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 및 지체없이 고시

* 다만,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(「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」 제3조 단서)

<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>

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(이하 ‘기본계획’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
2.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
3. 남한과 북한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4.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(이하 ‘기본계획등’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기본계획등의 수립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
2.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: 변경 후 30일 이내

-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변경(「남북관계발전법」 제13조의2 제2항)

- 평가 결과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

<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>

제13조의2(기본계획등의 평가)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한다.

②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변경한다.

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,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>

제6조(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)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.

1. 기본계획: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

2. 연도별시행계획: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

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1. 기본계획: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

2. 연도별시행계획: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

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.

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2

수립 경과

○ 시행계획(안) 마련 (‘25.3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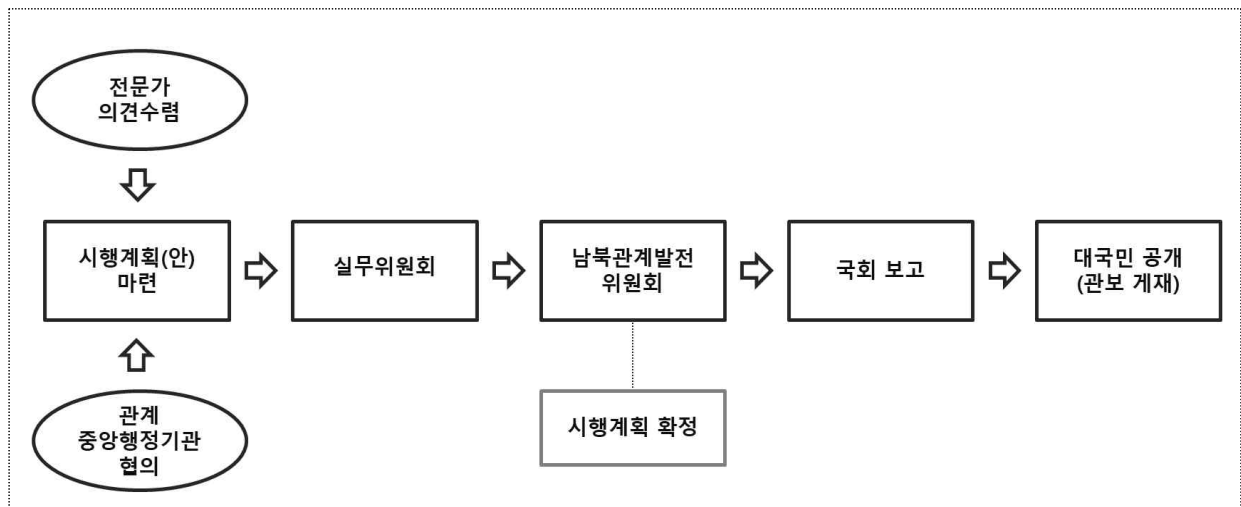
-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(안) 작성

○ 시행계획 심의·확정 (‘25.4.)

-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,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

○ 국회 보고 및 고시 (‘25.4.)

-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, 대국민 공개(관보 게재)



1

주요 성과

□ 북한 비핵화 환경 조성 노력 지속

- 「담대한 구상」을 바탕으로 △전제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△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시 경제·정치·군사적 협력방안 논의 가능 메시지 일관되게 발신
- 미·일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, 「담대한 구상」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
 - * 정상·외교장관급 총 14건의 공동성명에 「담대한 구상」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반영

□ 통일비전 확산 및 남북관계 정상화 기반 마련

- 「민족공동체통일방안」('94)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및 북한의 「적대적 두 국가」 주장 등 변화된 통일 환경을 반영한 <8.15 통일 독트린> 발표
- 8.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 당국 간 「대화협의체」 설치 제안 등 남북 대화 추진 및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하면서,
 - 북한의 △금강산 시설 무단철거 △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폭파 등 남북 합의 위반 및 재산권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
 - * △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 관련 성명 발표('24.5.) △북한의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폭파에 대한 성명 발표('24.10.) △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전통보 촉구('24.6., '24.7.)

□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질서 확립

- 「남북교류협력법」 위반 처리 기준 마련 및 원칙 있는 적용을 통해 질서있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*, 국민 안전 등의 견지에서 필수사안 중심 북한주민접촉 관리
 - * △「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」 개정('24.5.) △과태료부과심의위를 통한 위반사항 대응(2회)
- 언어·역사 분야 등 그간의 남북공동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 기여
 - * △겨레말큰사전 종이·전자사전 편찬 추진 및 국제학술포럼 개최('24.10.) △개성 만월대 「열두 해의 발굴展」 순회전시 실시(3회)

□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 경주

- 「북한인권보고서」 연례 발간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전개, 유엔·주요국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(11.7. 北 UPR 등)에 인용·반영
- 한미일 첫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*(10.18.)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,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담론 확산

* △3국 공동성명 발표 △한미간 북한인권 관련 연락그룹(Contact Group) 신설 합의 등

- △「북한인권 국제대화」 개최 확대* △북한인권조사위원회(COI) 보고서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포럼 개최(5.30.) 등 공론화 기반 확대

* '23년 국내 1회 → '24년 해외 2회(7월 워싱턴, 10월 제네바)

- 북한인권 인프라인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착수 및 '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'(19개 단체 18억 원 지원)을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 지원
-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

*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2회 발송('24.7.31, '24.11.18.) 등 협력 지속

□ 북한이탈주민 안전망·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역량 확충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날」(7.14.) 국가기념일 첫 제정 및 기념식 개최, 남북한 주민 통합의 전기 마련 및 '정착·역량·화합' 등 10대 후속조치 과제 수립·추진
- △정착기본금 인상('24년 1,000만 원→'25년 1,500만 원) △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 △마음건강 지원체계 등 정착지원 강화 및 촘촘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
- △교육지원 대상 확대(제3국·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까지, '25.4. 시행) △새출발장려금 신설 등 교육기회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

* 북한이탈주민 지원번호인 제도 운영 및 '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' 증보판 발간('24.12.)

□ 이산가족,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

-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(5년→3년),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('24.7~12월) 및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노력

* △「제2회 이산가족의 날」 기념행사 서울시와 공동 개최(9.10.~10.27.) △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(1,002편) 및 유전자검사 실시(1,525명)

-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△‘세송이물망초’ 상징 보급(‘24.2~) △억류자 관련 한·미·캐나다 성명(‘24.9) 등 국내외 공감대 확산 강화
 - * 고령 귀환 국군포로의 수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자체 「방문 건강관리서비스」 연계
- 북한지역 수해 관련 지원 제의(8.1) 및 수해지원 목적의 민간단체 접촉신고 수리 등 인도적 대북지원 노력 지속

□ 북한 정보분석 및 정책수립 역량 강화

-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·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·운영 및 상업위성 영상 분석 도입으로 북한 동향 분석의 시의성 및 분석의 질 제고
- △「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」(2월 국문판·8월 영문판) 최초 발간 △북한 정보포털*·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개선
 - * 일평균 접속 건수: '23년 9,092건 → '24년 19,058건으로 증가

□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

-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일교육 기본교재(통일문제 이해, 북한 이해) 발간(‘24.7) 및 대상별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인식 제고
- 탐방과 교육을 결합한 통일·안보 현장견학 최초 실시 및 참여·체험형(GPS·AR 활용 ‘유니 투어) 통일교육 강화
- 학교 및 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
 - * △통일교육센터(10개) △통일교육위원(1,000명) △통일교육 선도대학(8개교) △통일관(13개) 등

□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

- ‘통일미래기획위원회’ 중심, 통일 공감대 제고·통일담론 공론화 추진
- 강원권 「통일+센터」 개관(‘24.10) 등 통일행정 종합서비스 확대
- 공연·전시·체험이 어우러진 통일문화행사 「통하나봄」 개최(3회)
- △「국제 한반도 포럼」(GKF) 확대(‘24.9) △8개국 대상 「글로벌 통일인식조사」 최초 실시(‘24.9~10.) 등 통일·대북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

□ 북한의 핵·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지속

- 북한은 핵·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대남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지속
 - * 탄도미사일 13회 발사(우주발사체 1회, 단거리급 8회, 중거리급 2회, 장거리급 1회, 미상 1회)
 - **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(총 32회), GPS 교란 등
- 한편, 북한은 △러·북 신조약 체결 △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 등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

□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

- 북한은 2차 미·북 정상회담('19.2) 결렬 이후,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등 남북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
 - 남북 연락채널 차단('23.4) 이후 단절 상황도 지속
- 북한의 △'적대적 두 국가' 관계 주장 △대남기구 폐지 △남북연결 철도·도로 폭파 등 남북관계 단절조치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반 약화
- 북한의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위반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 지속

□ 국내 통일 공감대 약화

- 통일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, 세대 간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인식 격차 확대
 - * '21년~'23년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(통일부 통일교육원) :
청소년 '통일 불필요' 인식도 25.0%('21)→31.7%('22)→38.9%('23)
 - ** '24년 하반기 통일·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(통일부) :
통일 관심도 67.4%(△30대 이하 49.6% △40·50대 73.4% △60대 이상 77.2%)

□ 원칙에 입각한 통일·대북정책 견지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
○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 등 일관된 대북정책 견지

-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' 수립·추진
- 우방국과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·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
- 유관기관 협업 下, 대북정보 네트워크 운영 등 대비태세 유지

○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

-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하에, 남북 간 현안 해결에 도움되는 대화 지향
-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는 원칙있게 대응

□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

○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

-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「2025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
-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관련, 토지매입·건축설계 완료 후 상반기 내 센터 착공
- 국제공조 下, 여건 조성 시 보건·영양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

○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

- 「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」 수립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
-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대
-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

□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·내실화

○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기반 확충

- 중앙-지방정부,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(생태계) 형성
-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탈북민 현장지원 역량 강화
- 「북한이탈주민법」 개정 등 국내 입국을 원하는 해외 탈북민 지원 규정 정비

○ 북한이탈주민 교육·일자리 기회 확대 및 사회안전망 제공

- 학자금 지원 대상확대 등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강화
- 탈북민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안정성 강화
-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대상 특화된 위기관리체계 운영

□ 국내 통일인프라 및 통일교육 강화

○ 통일 관련 인프라 발전 및 관련 제도 정비

- 경기권(의정부)·충청권(홍성) 「통일+센터」 2개소 추가 신설
-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
- 「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」 안정적 건축(27년 개관 목표) 및 콘텐츠 확대

○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도입 및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

- 미래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'AI 기반 통일교육' 도입
- 젊은 층의 통일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대상 토론회 등 확대 실시
- 광복 80주년 계기, 국민 참여형 '통일문화행사' 개최

□ 글로벌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 추진

○ 우방국 등 국제사회 대상 통일·대북정책 협력 강화

- 미·일·독 등 주요 우방국 공조 강화 및 EU·호주·ASEAN으로 협력 대상 확대
-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대미 통일·대북정책 아웃리치 실시
- 해외 주요 연구기관·연구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·확대

○ 국제사회 대상 통일 공공외교 확대

- 국제 한반도 포럼(GKF) △의제 다변화 △참여국 확대 등 통해 통일인식 확산
- 주요 8개국 일반시민 대상 「글로벌 통일인식조사」 지속 추진
-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 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

1

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

1-1

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
(외교부·통일부·국방부)

□ '24년 실적

- 북핵 위협 억제, 북한의 핵 개발 단념, 북한과 대화 추진 등 북한이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하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
 - (억제) △한미 핵협의그룹(NCG) △국방·외교당국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의체(EDSCG) 중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지속 및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
 - (단념) △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메시지 발신 견인 및 '북핵 불용' 여론 공고화 △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△러·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견인
 - * △대북 독자제재 지정(9회) △ICBM 발사(10.31.) 대응 고체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최초 발표
 - ** (러·북 대응·규탄) △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(1.10.) △우방국 연쇄 독자제재 및 관련 장관급 공동성명(5.31.) △한미일 공동성명(6.24.) △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(12.17.) 등 발표
 - (대화·외교) △우방국 공조 下,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지속 재확인 △북한 참여 다자회의체(ARF)·1.5트랙 회의체에 모두 참석, 북한과 대화 가능성 모색

□ 추진 계획

-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억제·단념·대화(3D)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며, 미 실행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 체계 구축
 - △미 실행정부와 북한·북핵 문제 관련 조율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요 인사 대상 소통 강화 △한미 확장억제·한미일 3국 공조·안보협력 확대 지속 추진 △북한 도발시 미·일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 단호히 대응
 - △러·북 불법 협력 중단 △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통한 핵·미사일 개발 자금·자원 조달 차단을 위해 한미 등 국제공조 및 민관협력 강화
 - 북한이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,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촉구

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

(외교부·통일부·국방부·기재부·과기정통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국토부·해수부 등)

□ '24년 실적

○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

- △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△국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추진
△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시 경제·정치·군사적 협력방안 논의 가능
메시지 일관되게 발신

○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

- 정상 외교, 양·다자 외교일정, 정무활동 등 각종 계기를 통해 「담대한 구상」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
 - * 정상·외교장관급 총 14건의 공동성명에 '담대한 구상'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반영
- 전문가·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 및 포럼 개최

□ 추진 계획

○ 美 신행정부 출범 계기,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지속

- 미·북 대화 가능성에 대비,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 전략
보완·발전

○ 우리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

- △양·다자 외교행사 적극 활용 △국내외 유관기관 소통·협력 확대
△주한외교단 및 국내외 전문가 대상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

1-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(외교부)

□ '24년 실적

- 우방국·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 지속
 - 한미 실무그룹 회의(2회),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(2회)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우방국 공조 강화
 - △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합동 민관 심포지엄 개최(8.27.) △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설명 팸플릿 개정 및 국내외 배포 △ASEAN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 사업 확대(5개국→7개국)
 - IT 인력 등 사이버 분야 제재 3회 지정(한미 공동 1회 포함)
-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금수품 밀수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 차단
 -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, '24년 총 20척 제재 지정
 - 한미 범부처 '강화된 차단 TF' 출범 및 회의 개최(3월)
 - * 한미 외교·정보·제재·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·기관에서 30여 명 참석
 - 한미일, 해상업계 역량강화 심포지엄 공동 개최(12월, 싱가포르)
- 국제사회 대상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및 신규 미접수 지속 제기

□ 추진 계획

-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,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및 민간분야 인식 제고 노력 지속 추진
 - 한미·한미일 실무그룹 등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대응 공조 지속
- 북한 해외노동자 체류국 및 불법 해상환적 관련국 등 대상 문제 제기 및 교섭 지속

1-4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(외교부·통일부)

□ '24년 실적

- 미·일 등 우방국과 대북 공동메시지 발신 및 중국의 역할 견인 노력 지속
 - 한미·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최고위급 차원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 천명 및 각급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방향 긴밀 조율
 - * △정상·외교장관급 공동성명(6회) △북한 도발시마다 한미일 북핵대표·부대표 협의 실시
 -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면서, 북한의 진영대립 조장 시도 저지 및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촉구
 - * △한중 정상급 회담(2회) △한중 외교장관회담(3회) △북핵외교기획단장-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면담(2회)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
 - 정부 간 대화 등 계기 시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 설명 및 통일담론 지지 확보 노력
 - * △통일부장관 미국 방문(7월·10월) △통일부차관 독일 방문(10월) △국제 한반도 포럼(국내 1회, 국외 2회) △통일부 장·차관 주한공관 관계자 정책설명회(4월·9월·10월 등) 등
- 러·북 불법 협력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견인
 - 러·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러시아에 지속 제기 및 북한군 파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규탄 여론 결집 주도
 - * 독자제재 지정 4회(우방국 연쇄 제재 2회 포함)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등
- 주요국 및 UN, IMO, IAEA 등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 주도
 - 북한이 참석하는 각종 국제회의(ARF 등) 결과 문서에 도발 규탄, 비핵화,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등 핵심 요소 포함 성과

□ 추진 계획

- 주요 우방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
 - 미·일 등 우방국들과 △北 비핵화 △러·북 불법협력 중단 등 협력 지속
 - 국제 한반도 포럼(GKF) 및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통한 해외 오피니언 리더·연구자와의 소통 확대
 - 북한의 도발 중단·비핵화 관련 중국의 역할 견인을 위해 각급 소통 지속
- 북한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
 -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결집 및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 지속

2-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(통일부)

□ '24년 실적

○ 남북 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복원 노력 경주

- <8.15 통일 독트린>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
 - * △실무 차원에서 긴장완화, 경제협력, 인도적 현안 등 남북 간 관심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논의 가능 △대화에 열려있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, 계기 시마다 북한에 호응 촉구
- 남북합의 시간대(9시·17시) 매일 정기통화 시도(1일 2회), 주요 계기 시 북한에 연락채널 복원 촉구
 - * △제40회 망향경모제 격려사(2.10., 통일부장관) △<8.15 통일 독트린> 관련 언론 브리핑(8.16., 통일부장관) 등

○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단호히 대응

- (개성공단) 북한의 개성공단 內 우리측 시설 무단 가동 및 송전탑 등 시설 철거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
 - *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표명
- (금강산) 금강산지구 내 우리 시설 무단 철거 동향에 대해 북한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중단 촉구, 유감 표명
 - * 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('24.5.)
- (철도·도로) 북한의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폭파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
 - * 폭파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,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 성명 발표(10.15.)

○ 원칙있는 대북정책 견지 및 북한 변화 견인

-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 변화 촉구 메시지 발신
- 북한의 도발·위협·선전선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 입장 표명
 - * △대남 오물·쓰레기 풍선 살포 등 관련 통일부 입장(5.30.) 발표 △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관련 정부 입장(9.13.) 발표 등

□ 추진 계획

○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 하에 대응·대비체계 강화

- 북한의 각종 도발·위협·선전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, 남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 지속 견지
- △남북 간 현안(긴장 완화, 억류자·이산가족 등)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화 지향 △남북 대화 재개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비역량 강화
 - * △직원 대상 회담 준비 프로세스 교육 실시 △남북 대화 모의훈련 △회담전략 자문 등 실시
- 인도적 사안 해결·재난재해 대응 견지에서 북한에 연락채널 복구 메시지 지속 발신
 - * 유관기관 간 연락채널 체계 정비, 남북출입 모의훈련 및 출입시스템 주기적 점검 병행

○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있게 대응

- **(개성공단)**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 촉구 및 메시지 지속 발신, 관련 기업 등과의 긴밀한 소통하에 대응방안 검토
- **(금강산)** 금강산지구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 관련 상황 예의주시 및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하에 대응
- **(철도·도로)** 철도·도로 관련 북한에 제공한 차관 상환에 대한 조치 검토

○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·대북정책 메시지 지속 발신

-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' 추진 메시지 발신

□ '24년 실적

○ 남북 공유하천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관리조치 이행

- 북한에 댐 방류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사전통보할 것을 촉구(6.28., 7.3.)
- 장마철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시설 현장점검(7.3., 통일부장관)

○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·환경문제 대응

- 홍수기 접경지역 수해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* 실시
 - * 필승교 수위, 댐 수문 등 모니터링,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통보, 경보방송 등 조치
- 북한 기후환경 정책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전문가 세미나 개최(11.27.)
- 임진강·북한강 유역 면적강수량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·제공(상시)
 - *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(hydro.khazard.go.kr) 제공
- 세계기상통신망(GTS)을 통한 「북한기상연보」 생산(9월) 및 위성자료를 통한 백두산 화산활동 분석 및 수준 평가(10월)

○ 「평화경제특구법」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

- 「평화경제특구」 기본구상(기본계획 수립 前 단계) 연구용역 추진(국토연구원 수행), 특구의 비전 및 방향 제시
-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위원(10명)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, 국회·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관련 공감대 형성

○ DMZ 그린데탕트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
-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전대책 수립('24.12.)
 - * DMZ 공간특성, 생태가치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 가이드라인 제시
- DMZ 일원 및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 추진('24.2.~'25.1.)
 - * ('24년 조사지역) 민통선 해제지역(철원, 화천) 및 평화의 길(강화, 김포, 고양(민남))
-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민간협력 및 국민참여
 - * 북한이탈주민 소통간담회(2.7.), 탄소중립 평화의 숲 나무심기(5개 단체, 5천 4백명 참여)

□ 추진 계획

○ 남북 공유하천 유역 우리 국민 생명·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

-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통보할 것을 지속 촉구
-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 대응체계 운영·유지
- * △임진강·북한강 유역 강수량 △군남댐·평화의댐 수위 △북측 댐 방류 여부 감시

○ 남북 간 재해재난 및 글로벌 기후·환경이슈 대응

-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강우 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(지속)
- 위성기반 수문 및 폭염·가뭄 상시정보 제공(상시, 누리집 제공)
- 원격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지표 변위, 화산활동 수준 평가(10월)
- 북한 재해재난 관련 DB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용역* 실시
- * 「북한 주요 재해·재난 취약 공간 및 대응 인프라 지도」('24.6.~계속)

○ 평화경제특구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

-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* 수립
- * 기본계획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공개, 국내외 특구 사례조사 병행
- 특구 관련 협의체 및 전담기구 구성·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
- * △특구 위원회 운영 내실화(주요사항 심의·의결, 연내 2회) △지자체·유관부처 상시 협의체 운영(연중) △전담기구 설치('평화경제특구추진TF', 1월~) 등

○ DMZ 그린데탕트 및 보전·관리대책 마련

- DMZ 일원 및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 추진('25.2.~'26.1.)
- * ('25년 조사지역) DMZ 중부산악권역(철원, 화천) 및 평화의 길(파주, 연천)

○ 글로벌 기후·환경이슈 대응 준비

- DMZ·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 및 MOU 단체와 평화의 숲 조성으로 산림협력 기능 지속 유지
- * 먹좁벌 방사 효과조사(3월), MOU 단체와 평화의 숲 조성 캠페인 추진(4월~6월)
- REDD+ 사업을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연구(계속)

□ '24년 실적

○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정비 및 사전·사후 관리체계 확립

- 「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」(통일부 훈령) 개정(5월)
 - * △과태료 납부기한 연장(15일→60일) △과태료부과심의위 민간위원 확대(2명→4명)
- 「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」 심의를 통한 위반사항 대응(2회, 과태료 4건 부과 등)
- 「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」를 통한 관련 법령·제도 안내 및 상담 실시

○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필수사안 중심 북한주민접촉 관리

- 국민 안전, 재산권 보호, 수해지원 등 목적의 접촉신고 수리

○ 정부와 지자체·민간단체·기업 간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

-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체계 유지
 - * △종교지도자 면담 등(9회, 통일부장관) △정례협의회 및 단체 면담 등
- 경협·교역 기업 등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추진
 - * △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('24.5., 통일부장관) △경협기업 단체 간담회('24.5., 통일부장관)
 - △경협기업 단체 간담회('24.2., 남북관계관리단장) 등
- 지자체실무협의회(4월) 및 정책협의회(12월) 개최, 찾아가는 지자체 협력 대화(11개 시·도) 추진

□ 추진 계획

○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·제도 정비 및 사전·사후 관리체계 강화

- 「남북교류협력법」 및 관련 법령 개정 검토, 계기 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
- 「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」를 통한 대국민 상담 및 안내 강화

○ 정부와 지자체·민간단체·기업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

- 역사·종교·체육 등 민간교류 추진 단체와의 소통·협력기반 강화
- 경협·교역 기업 등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추진(계속)
 - * △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△판로 지원 △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
- 지자체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지속 추진, 지자체 실무 담당자 대상 교류협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

□ '24년 실적

○ 겨레말큰사전 성과 축적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

-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성과를 활용, 종이사전 및 전자사전 발간 준비
- 국제학술포럼, 겨레말 TV 운영 등 온·오프라인 홍보사업 지원
 - * △제5회 유네스코-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('24.10.10.~11.) 개최 △'전국 겨레말 나들이' 행사 2회 개최(서울) △<겨레말문화학교> 강좌 8회 운영 △겨레말 TV 유튜브 채널 운영 등

○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과 연계,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 역량 강화

- 남북공동 발굴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·정리하여, △아카이브(디지털 기록관) 구축·운영 △순회전시 등 추진
 - * △'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순회전' 3회 개최, '20년~'24년까지 누적 방문자 수 약 22만 여명 △디지털 기록관 운영
- 유관부처 협업 下, 디지털 복원 사업 4년차 사업 진행, 향후 남북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재개 대비 동력 유지 및 역량 강화
 - *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성과 검토 및 다각적 쟁점 공유·사업 확장을 위해 학술대회 실시('24.4., '24.9.)

□ 추진 계획

○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반 마련 및 역사·문화 동질성 회복 사업 지원

-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,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내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, 전자사전 발간 준비 및 홍보 사업 지속 추진
 - * △제6회 유네스코-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△'전국 겨레말 나들이' 행사 개최 △<겨레말문화학교> 강좌 확대 운영 △겨레말 TV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홍보사업 추진
-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성과 확산(유관부처·역사학계 협업)
 - * △디지털 복원(5차) △'디지털 기록관' 신규콘텐츠 제작 △상설전시 기획 등

3-1

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

(통일부·외교부·법무부 등)

□ '24년 실적

○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및 공감대 확산 노력

- '23년에 이어 「2024 북한인권보고서」 공개발간(6.27. 국문판, 9.10. 영문판)
-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사업 본격 착수
 - * △건립 부지 마련 △건축설계 진행 △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실시 △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등
-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북한인권홍보대사 첫 위촉

○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활동 지원

-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2년차 실시, 19개 단체 18억 원 지원
 - * 민간단체 주관 북한인권 관련 문화공연 지원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○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

- '24년부터 「북한인권 국제대화」를 국내 1회 → 해외 2회 개최로 확대 하여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 도모
 - * △(7월, 워싱턴 D.C.) 「2024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 계기 확산 도모
 - △(10월, 제네바) 북한 UPR 수검 계기 국제사회·NGO 협력 추진
- △미국·캐나다 등 주요국과 북한인권 공조 강화 △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UPR 적극 참여 △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등 북한인권 국제공론화 기반 확대
- △고위급 교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△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(5.30.) 등 청년·시민사회 관여 확대
 - * 정상·외교장차관급 총 20건의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증진 협력 문안 반영
 - ** △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(4.15.) △한캐 북한인권 협의 출범(5.31.) △한미캐 3자 북한인권 협의 최초 개최(10.8.) △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(수시)

○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「북한인권법」 이행 정상화 노력

- *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2회 발송(7.31., 11.18.) 등 협력 지속

□ 추진 계획

○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

-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「2025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
 - * 북한인권 실태의 종합적·심층적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확대 등 추진
-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관련,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 후 상반기 내 센터 착공('26년 완공 목표)
 - * 전시공간 구상,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구성·운영 준비도 병행
- 북한인권 관련 영문서적 재외공관 배포사업 추진
- 북한인권홍보대사를 통한 북한인권 관련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

○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 및 국제사회 다차원적 협력 전개

- 북한인권 민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속 실시('25년 29.3억 원)
 - * 신규·탈북민 단체 접근성 강화, 2030세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년도 사업 등 지원방식 다양화
- 국제기구·유관국·NGO가 참여하는 「북한인권 국제회의」 개최를 통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
- △고위급 협의 계기 협력 메시지 지속 발신 △미국, 캐나다, EU 등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△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 등 對국제사회 소통 확대
- △안보리 등에서 북한인권 논의 지속 추진 △인권이사회 이사국(2025-27) 수입 계기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인식 제고 노력 강화

○ 북한인권 관련 젊은층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저변 확대

- 북한인권 에 대한 문화·감성적 접근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제·방식의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및 온라인 기반 홍보·확산에 중점
-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·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* 운영
 - *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 영어강의 및 오프라인교육·현장견학 기회 등 제공

○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·협력 지속

- * '25년,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예산 4.75억 원 편성(그 외 필요시 예비비 편성)

○ 유형별 분석을 통한 북한인권기록의 정확성·신뢰성 보강, 가해자 중심 DB 운영

3-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(통일부)

□ '24년 실적

- 제40회 합동경모제(2.10.) 격려사 등 계기 시 북한의 호응 지속 촉구
-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
 - '제2회 이산가족의 날' 기념행사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
 - * △기념식(9.15., KBS) △기념전시(9.10.~10.27., 서울역사박물관)
 -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·위로 행사 및 계기 시 고령 이산가족 위로방문 실시
 - 이산가족 2~3세대 현장견학 및 정책설명회 실시
- 이산가족 교류기반 조성
 - 실태조사 주기 단축(5년→3년),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(7월~12월)
 - △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(1,002편) △이산가족 유전자 검사(1,525명) 등 실시
 - * 해외 거주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최초 실시(27명)

□ 추진 계획

-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촉구
- 「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('26년~'28년)」 수립
 - 제4차 실태조사('24년) 결과 반영 및 이산가족·단체, 유관기관, 전문가 등 의견 수렴
-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및 공감대 확산
 - 영상편지 제작,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지속 실시하되, 해외 이산가족 대상 사업 확대
 - '제3회 이산가족의 날' 기념행사 및 지역별 초청·위로 행사 실시

□ '24년 실적

○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를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화 노력

- 주요 계기 시 독자적 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우리 국민의 송환과 생사확인 요구

* △국무회의시 대통령 모두발언(3.26.) △고교생 납북자 송환지원비 기념사(통일부장관, 5.24.)
△'6.25전쟁 납북피해자' 기억의 날 기념사(통일부장관, 6.28.) △세계 강제실종의 날 계기 '납북
억류강제실종 문제 호소 공청회' 개최사(통일부차관, 8.29.) 등

-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

* △「서울패션위크」에서 '세송이물망초' 상징 공개('24.2.) △국무회의 배지 패용(3.26.)
△영국 의회 APPG-NK 성명 발표·배지 패용(3.26.) △'세송이물망초의 정원' 행사 등

○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

* 제24차(6.20.), 제25차(12.23.) 개최

○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맞춤형 지원 강화

- △전후납북자 가족 추가 확인 및 피해위로금 지급 △귀환납북자 및 귀환국군포로 대상 다양한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

* △고령 귀환포로의 수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「방문 건강관리서비스」 연계
△기정방문 및 장례지원비 증액(300만 원 → 350만 원) 등 예우 강화

○ 국제사회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노력

- 미·일 등 유사입장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압박 지속

* △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, 억류자 가족 해외활동 지원 △제2차 한미 북한
인권 협의(4.15.) △제9차 한·일·중 3국 정상회의(5.27.) 공동선언에 납북 문제
포함 △김정욱 선교사 억류 4,000일 계기 한·미·캐나다 성명 발표(9.20.) 등

- 고위급 교류 계기 공동성명,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 등 계기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지 발신

* (정상) △뉴질랜드(9.4.) △ASEAN+3(10.10.) △한미일(11.15.) 등 / (외교장·차관) △한미일
(5.31) △ARF(7.27.) △한-영국(10.21.) 등 공동성명에서 문제 해결 촉구·중요성 강조

-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(6.12.), 북한 제4주기 UPR(11.7.), 유엔 총회·인권이사회 등 다자무대에서 동 문제 제기

□ 추진 계획

-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요국·기관과의 연대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
 -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(COI)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'포괄적 보고서' 작성 계기 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
 - 유엔 북한인권결의안(12월)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
 - 국군포로 생존자 등 실태 파악을 위한 UN,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
-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장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
 - 통일부·지자체·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1회 「6.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」 법정기념일(6.28.) 행사 기획 추진
 - 서울시와 함께 '세송이물망초' 행사 추진 등 '문화적 접근'을 통해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

* 도심(보라매공원)에서 진행되는 「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」(5.22.~10.20.) 참여,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'세송이물망초' 정원 조성 등 추진
-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 확대·강화를 위해 증액된 관련 예산을 활용, 실질적 도움이 되면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·추진
-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지속 노력
 - 고위급 교류 및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 등 계기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지속 조명을 통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
 - 유엔 총회·인권이사회 등 유관 계기 동 문제 지속 제기 및 지지 확보

□ '24년 실적

-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원칙 견지 및 수해지원 등 노력
 - 신의주 지역 수해 피해 북한 주민에 대한 △인도적 지원 제의(8.1.)
△민간단체의 수해지원 목적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(8.30.~10.5.)
- 국제기구·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도적 상황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
 - UNICEF·WFP·WHO·FAO 등 국제기구와 북한 복귀 및 사업준비 동향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협의
 -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진단
 - * △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(6.5.) △북한 민생경제 진단(6.19.) △북한 결핵 관련 국제세미나(11.5.) △기후 환경 라운드테이블(11.27.) 등
 - 대북 수해지원 제의 등 관련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기본 입장* 설명(24.8.)
 - *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
- 민간단체·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확보 및 제도적 기반 정비
 - 접촉·물자반출·유엔제재 면제·보조사업 등 관련 소통 관리, 대북지원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

□ 추진 계획

-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제기구 등과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
 - △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관심 제고 △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속
- 여건 조성 시,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
 - 보건·영양·기후환경 등 분야별 지원 방안 모색
 - * '25년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(구호지원 +159억 원, 영유아 및 보건의료 지원 +1,200억 원)

3-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(통일부·교육부·외교부·법무부·지자체)

□ '24년 실적

○ '북한이탈주민의 날'을 국가기념일로 제정

- 제1회 기념식(7.14.)에서 정착, 역량,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
- 탈북민에게 가장 긴요한 10대 후속조치 과제 수립 추진

1	정착	① 초기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 ② 「미래행복통장」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③ 탈북여성 일·육아 병행 지원 ④ 제3국/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제도화 ⑤ 중앙-지방정부 협력, 촘촘한 안전망 구축
2	역량	⑥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⑦ 탈북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⑧ 탈북민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
3	화합	⑨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⑩ 지역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

○ 제4차 「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」('24년~'26년) 수립·시행(5.28.)

- △제3국 출생자녀 등 탈북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강화, △우리사회 건설적 기여자로서 역할 제고 등 차별화된 정책 중점 제시

○ 취약계층 지원 및 자립·자활 역량 강화

- △'25년 정착기본금, 전년대비 50% 인상 반영(1,000만 원→1,500만 원)
△무연고청소년 가산금(월 20만 원) △새출발 장려금(최대 600만 원) 등
- 「북한이탈주민법」상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확대(10.22.)하는 등 제3국 및 국내 출생자녀 교육지원 제도화

○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 기반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보호 노력

- 「하나마음쉼터」(강원) 설치 등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시설 간 협업 강화
-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

* △「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」 정식 운용 △독거고령 탈북민 대상 안부 확인 시범사업(「뚝뚝! 안녕하세요?」) 추진

○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제공

-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법무부 주관의 전문적인 법률 교육체계 운영(기관별 월 1회)
- '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'이 유선·온라인(홈페이지·카카오톡) 및 하나센터 방문 상담('24.12. 기준 누계 총 2,374건 진행)
- 북한이탈주민 지원번호인 및 하나센터 담당번호사 제도 운영

* △지원번호인 71명 위촉, 북한이탈주민 89명 지원('24.12. 기준) △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담당번호사 40명 위촉(센터별 1~3명, '24.12. 기준)

□ 추진 계획

○ 교육지원 강화 및 통일인재 육성

- 학자금 등 교육지원 대상 확대(탈북민→탈북민 자녀, '25.4.) 및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
- 한미대학생연수(WEST) 등 탈북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확충

○ 자립·자활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

- 공공부문 채용확대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(세제, 우선 구매 등)
- 재단 내 「창업보육센터」 신설 등 창업자 지원 정책 강화
- 글로벌 기업 협력을 통한 탈북민 직무훈련 프로그램 시범실시

○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

- 탈북민 가정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 추진
- 고령 탈북민, 장애인,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대상 특화 위기관리체계 운영
- 권역별(서울, 인천, 강원 등) 구축된 마음건강 지원 시설 간 협업 강화

○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기반 확충

- 중앙-지방정부,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(생태계) 형성
 - * 탈북민 지원 중앙-지방협력소위원회 등 지자체와 정책 강화
-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 종사자 처우개선(시설화), 현장지원 역량 강화
- 3종 보호담당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(사전 교육 이수)

○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구조·연계체계 강화

- 법률상담 이후 소송 등 후속 단계에서의 구조·연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·전문인력*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
 - * △대한변협 △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△전국 하나센터 변호사 및 상담인력 △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△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등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

○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및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

- 관련국·국제기구와 양자·다자 차원의 소통 및 협력 강화
- 국내 입국 전 해외 탈북민의 보호·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확대
- 「북한이탈주민법」 개정*에 따른 시행령·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 공고화
 - *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가능

4-1

정보분석 역량 강화(통일부·국방부)

□ '24년 실적

○ 북한 주요 정치행사, 군사 도발 등 계기 시 신속 분석

- * △당 중앙위 8기 10차 전원회의(6.28.~7.1.), 11차 전원회의(12.23.~27.) △최고 인민회의 14기 10차회의(1.15.), 11차회의(10.7.~8.) △미사일·군 정찰위성 발사, 무력시위 등 군사도발 △김정은 공개활동, 대남 발언 △김여정 담화 등

○ 위성 영상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

- 국내 위성 영상에 더해 해외 상업 위성영상을 추가로 활용, 북한 주요 동향 및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신속 심층 분석 기여

- * (주요 동향) 금강산지구, 개성공단, 신의주 수해지역, 동해선·경의선 폭파 등

○ 국내외 주요 기관 교류,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

□ 추진 계획

○ 북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대북현안에 적시 대응

- △당 전원회의 등 주요 정치행사 △김정은 동향 △무기개발 및 무력 시위 등

○ 위성영상·빅데이터 등 활용, 분석기법 다각화·효율화

- 고해상도 해외 상업위성·국내 다목적위성 등 다양한 위성 자원을 활용, 분석의 신뢰성 제고

○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·물적 인프라 지속 확대 노력

- △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 및 분석기법 공유·협력 네트워크 강화
△빅데이터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

4-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(통일부·외교부·국방부)

□ '24년 실적

- '23년 조직개편 이후 안정적 정보 수집·조사의 정착
 - '정보조사협력과'(통일부) 주관하에 충실한 정보 수집 및 체계적 관리 강화
 - * △북한 신문, 방송, 인터넷, 라디오 주요 동향 △해외 주요 기관, 연구기관 등 공개 자료 △주요국 주요인사 발언
 - 북한정책과 → 대북전략과(국방부)로 개편 및 업무수행체계 정립('24.7.)
- 정치·군사·대남·대외 등 분야별 기획 보고 적시 제공을 통해 깊이있는 한반도 대북·통일정책 수립에 기여
 - (계기별) △대남 도발 △북한 정세평가 및 주요 전략 전망(상·하반기) △북한 경제 주요부문 정책 동향 파악 및 평가 △북한 법·제도 △수해 동향 등
 - (경제분야별) △부문별·산업별 동향 △지방발전 20×10 정책 △월별 중북교역 분석 △러북 경제교류 동향 △예결산 분석 등
- 탈북민을 활용한 북한 정보를 통해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
 - 다양한 주제에 관련한 전문성 있는 탈북민 초청 간담회 실시
 - 북한 실생활, 시장 활용 등 탈북민들의 경험을 축적해 북한의 상황 파악

□ 추진 계획

- 분야별 심층 기획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 지원
 - 북한의 대내, 대외, 대남 전략 및 연도별 주요 중점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
 - * △북한정세 평가 및 향후 전망 △대남전략 변화 추이 △북한 경제 동향 파악 및 평가 △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
-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한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추진
 - 탈북민·유관국·국제기구·전문가 등 정보원천 다양화 노력 지속
 - AI·빅데이터 활용 자료 검색 및 분석 지원

□ '24년 실적

○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·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·운영

- △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(수시) △북한정보분석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(4회)
△연구기관과 합동세미나 개최(4회) △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 정기 교류 등
- '24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' 개최(1.4.)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
북한의 정치·군사·경제·사회·대외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망 의견 교환
- △주한공관 대상 한반도·평화클럽 라운드테이블(5회) △현지 전문가 등 초청
한반도정세 라운드테이블(3회) 등 계기 북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

○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및 탈북민 등 인적자원 활용 확대

- 유관부처 연계 下, 주기적인 북한(한반도) 정세분석·전망 동향평가
 - * △유관부처(통일·외교·국정원) 한반도 정세평가(분기별) △한미통합국방협의체(KIDD)
회의(4.11.) △한미안보협의회의(SCM, 10.30.) 등
- 국정원 분석관 통일부 파견 근무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
- △탈북민 초청 간담회 개최 △탈북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등

○ 경제 관련 주요 기관과 정례 세미나 개최로 북한 경제 상황 진단·평가

- △「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」 개최(5회) △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, 북한
경제·통계 관련 간담회 △농진청, 국립농업과학원 북한 농업 평가 등

□ 추진 계획

○ 부문별 정보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구축

- 국내외 부문별 전문가·유관기관과 상시적·유기적 협력체계 운영
 - * △공공(유관부처·공공기관) △민간(연구기관·탈북민·북한전문매체) △해외(정보기관·NGO·전문가) 등
- 세미나, 포럼, 전문가 자문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·활용

○ 대북정보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내실화

- △정치·경제 등 분야별 북한 전문가 자문(수시) △탈북민 출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

○ 북한 경제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「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」 개최

4-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(통일부)

□ '24년 실적

- △북한정보 수집 대상 기관 확대 △해외 자료 번역 품질 개선 △북한 인물 인식 성능개선 △시각화 콘텐츠 개발
 - * 북한정보포털 일평균 접속 건수: '23년 9,092건 → '24년 19,058건으로 증가
- 북한 동향 관련 테마브리핑 실시(6회) 및 北 권력기구도, 주요 인물정보 발간
- 「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」 착공(12.16.)
 - 고양시 및 기재부,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 후 착공
 - * △고양시와 부지 변경 매매계약서 체결(5.24.) △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(8.30.) △건축 인허가 획득(10.16.) 등 절차 진행
- 10년간의 조사결과(3급비밀) 축적을 토대로 북한 경제·사회 관련 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
 - 「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」(2월 국문판·8월 영문판)를 발간해 국내외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
 - * 10여 년간 탈북민 6,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

□ 추진 계획

- 주요 계기 시 주요 북한 변화와 관련한 테마브리핑 실시 지속
- 북한정보자료 콘텐츠 개선 및 접근성 제고 지속
 - △「북한정보포털」 내 시각 콘텐츠 확충 △국내외 정보 테마별 분류·제공 △북한자료 디지털화 계속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
- 「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」의 안정적 건축 및 콘텐츠 확충
 - '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시스템, 디자인 관련 연구 용역 추진 등 통일·북한 관련 도서관, 사료관으로서의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

5-1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(통일부·외교부)

□ '24년 실적

- '민족공동체통일방안' 30년 경과, 국제 정세 변화 및 북한의 '적대적 두 국가' 주장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<8.15 통일 독트린> 발표
 -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적 책무에 의거하여 '자유, 평화,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'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통일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
 - * 3대 통일비전 : △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△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△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
 - 3대 추진전략 : △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△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 △국제사회 연대와 지지 확보
 - 7대 추진방안 : ①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②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③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④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⑤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⑥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⑦국제한반도 포럼 창설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지지 견인
- '통일미래기획위원회' 중심, 민·관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제고·통일 담론 공론화 추진
 - 전문가 자문·특강·토론회 등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활동 확대
 - * △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·분과회의 등(22회) △전문가 의견수렴(34회) △5대 권역별 지방 설명회(5회) △세미나(6회) △청년층(3회) 등
-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통일비전 수립 및 아웃리치 과정에서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견인
 - 주한대사 정책강연회(4월, 외교부장관), 주한공관 대상 한반도·평화클럽 라운드테이블(1월, 7월, 9월), 유엔총회 기조연설(9월) 등 계기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

□ 추진 계획

- 광복 80주년 계기 통일담론 확산 및 통일미래비전 구체화
 - 폭넓은 의견수렴·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국내외 통일 공감대 사업 추진
 - * 국민대토론회, 독일 통일 35주년 계기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
- 북한의 '적대적 두 국가' 주장 및 통일 부정의 부당성, 우리의 한반도 통일 추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노력 지속

□ '24년 실적

- 통일부-경제인문사회연구회, '한반도 통일미래연구'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(10.16.)
 - 경인사 산하 15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일미래연구단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
 - MOU 후속조치로 「가슴뛰는 통일 대한민국」 공동 학술회의 개최(11.25.)
- '민간 기부금' 관련 「남북협력기금법」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개정(7.10. 시행) 및 규정(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) 개정(10.18. 시행)
 - 민간 기부금 적립계정 신설, 기부금 접수 절차 구체화 조항 신설
 - * 「탈북자동지회」(7.11.), 「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」(9.25.) 기부금 기탁
- 「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」 운영('24.10.~11.)
 - 통일에 대비하여 변호사, 법학전문대학원생,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
 - * 대한변협과 공동주관, '14년 아카데미 개설 이래 총 14기 운영, 794명 수료
- 「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」 개최
 - 통일법 분야에 대한 관심 환기, 신진 연구인력 발굴, 통일법제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해 「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」 실시
 - * '14년 제1회 개최 이후, '20년부터 매년 개최
 - 응모자격 제한 없이 공모,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(1편) 우수상(2편) 선정
 - * 통일법 분야 최초의 등재 학술지 「통일과 법률」에 수상작 게재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·홍보로 '24년 18편 논문 접수
- 등재학술지 「통일과 법률」 발간
 - 통일법제 관심 증진·연구성과 축적을 위해 전문 학술지 「통일과 법률」 정기 발행
 - * '10.2. 창간 이래 총 60회 발행(연 4회), 국내 통일법 분야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('21년), '재인증평가'로 등재학술지 유지('24년)
- 「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」 운영
 - 통일부·법무부·법제처는 각자 운영하던 통일법제 홈페이지를 '14년 통합하여 「통일법제 DB」로 구축, 통일법무 자료를 국민에게 공유
 - * 연구자료·법령자료·법률상담·검색 등 제공, '24년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따라 모바일 접속건수 대폭 증가('23년 20,545건 → '24년 591,641건)

□ 추진 계획

- 통일부-경인사 통일미래연구단 협업을 통한 통일연구 기반 강화
 - 정례회의(분기별), 공동연구(2~4분기), 통일미래연구단 공동 학술회의(하반기) 등 추진
- 헌법 제4조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·제도적 방안 마련
 - 통일법제 유관 기관·단체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 네트워크 기반 조성
- 「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」 운영
 - 통일에 대비하여 변호사, 법학전문대학원생,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
 - '25. 10.~11. 「제15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」 운영 예정(매주 1회, 6주간)
- 「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」 개최
 - 통일법 분야의 연구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」 개최 예정('25.6.~10.)
- 등재학술지 「통일과 법률」 발간(계속)
 - '25년 「통일과 법률」 제61호~제64호 정기 발행 예정(2·5·8·11월)
- 「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」 운영(계속)
 - 탈북민의 온라인 법률상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,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취약점·소프트웨어 예방점검 지속

□ '24년 실적

○ 북한·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

- 서울·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(18회*)

* △주요 행사 계기 7회 △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(3.18.~3.20.) 계기 1회 △대학교 개강 시즌(3월~4월, 9월~10월) 계기 10회 등

- 청년세대 대상 △동해안 자전거 국토종주(8.5.~9.), △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(9.12.~10.10.) 등 개최, 통일문화 정착의 계기 마련

○ 북한이해·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온·오프라인 콘텐츠 개발·확산

- '유튜브 채널 「K의 공식」('24.5. 신설)'을 통해 북한·통일 관련 다양한 영상 콘텐츠(56건) 제작 및 국내외 전파
- 탈북민 10인의 경험과 생애 이력을 주제별로 접근하여 '생애사'를 도출하는 구술채록 연구 용역 실시

○ 북한통계발전 분야별 협의체 기관의 보유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(4월~10월) 및 서비스 개시(11월)

- 북한통계 이용자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

○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해상 경제활동 관련 신규 지표 발굴

* 「위성자료 활용 북한 해상 경제활동 분석」 연구용역(4월~11월) 추진

○ 시·도지사협의회 산하 통일미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시·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, 통일교육 등 지방정부 통일 정책 활성화 지원

* 1차 위원회('24.4.) 2차 위원회('24.7.) 등 정기 회의 개최 및 2024년 통일미래 특별위원회 정책보고서 제작('24.12.)

□ 추진 계획

○ 북한·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접점 확대

- 전국 주요 도시에서 「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」 개최
 - * '2030 청년세대 맞춤형 기획'으로 탈북민과 함께 소통하는 '참여형 프로그램' 진행
- 청년, 청소년 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참여 및 주도 행사 연 2회 개최
 - * 창의적인 방식의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를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

○ 북한이해·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온·오프라인 콘텐츠 개발·확산

- 유튜브 채널 「K의 공식」을 통해 국민,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영상 온라인 콘텐츠를 연간 30여 편 제작 및 공개
- '탈북민 구술채록 연구'를 통해 탈북민 경험의 체계적 수집 및 활용
 - * 연령, 성별, 지역, 직업 등 각계각층의 탈북민 구술대상자 선정

○ 북한통계 관련 기초자료 공유 플랫폼* 활성화

- 북한통계 관련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통계 기초자료 수집·공유를 활성화
 - * KOSIS 및 북한통계포털(<https://kosis.kr/bukhan>)

○ 북한통계 품질점검 및 서비스 개선 연구 용역

- 북한통계 간행물 서비스 30주년을 맞아 「북한의 주요통계 지표」 책자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점검 및 서비스 개선

○ 시·도지사협의회 산하 2025년 통일미래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△통일교육 △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사업 지속 추진
- 통일업무 시·도 공동 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방안 개발

5-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·대북정책 공감대 형성(통일부·교육부·지자체)

□ '24년 실적

○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

-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일교육 기본교재(통일문제 이해, 북한 이해) 발간
- 탐방과 교육을 결합한 통일·안보 현장견학 최초 실시 및 인증앱 출시
 - * △(일반 국민) 10회 실시, 450명 참가 △(청소년) 163회 실시, 5,933명 참가 등
- 학교·지역거점과 연계한 '통일교육 생태계' 활성화
 - * △지역 통일교육센터(10개) △통일교육위원(24기, 1,000명) △통일교육 선도대학(8개교) △통일관(13개) 등

○ 통일정책 결정·추진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'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' 추진

- 주요 대상자별로 통일·대북정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*, 통일 공감대 확산
 - * △일반국민(7회) △오피니언 리더(3회) △청년(2회)

○ 권역별 통일+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·표준화 추진

- 강원권 통일+센터 준공 및 개관(10.25.), 경기권(5월)·충청권(8월) 본공사 착공
- 통합홈페이지 오픈(5월), 지역 통일+센터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구체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(3월~8월), 각 센터 공유
- 입주 하나센터 사용료 면제 특례 신설(1.9., 북한이탈주민법 개정)

○ 공연·전시·체험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'통일'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통일문화행사 「통하나봄」 개최(3회)

- * 지역별 통일문화행사 「통하나봄」 △서울(청계광장, 6.21.~22.) △인천(인천애들광장, 9.7.) △춘천(춘천수변공원, 10.25.~26., 강원권 통일+센터 개관식 행사와 연계)

○ 시·도 통일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(11.28.~29.)

-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부와 시·도-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소통 활성화

□ 추진 계획

○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

- 미래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'AI 기반 통일교육' 도입
 - * △ AI 통일미래 콘테스트 개최 △ AI 통일교육 강좌 개설 및 교수법 개발 지원
△한반도통일미래센터 AI 로봇 도입 및 체험관 리뉴얼 등
- 통일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'실감형(VR·AR) 통일교육 콘텐츠' 확충
- 남북한 출신 청년이 함께하는 '글로벌 통일체험' 추진
- 학교·지역거점과 연계한 '통일교육 생태계' 확장
 - * 통일교육 선도대학, 기존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

○ 청년세대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국민 합의 형성 사업 추진

- 젊은층의 통일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대상 토론회 확대
-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통일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도 포함하여 행사 추진
 - * '25년 추진계획 : △일반국민(8회) △오피니언 리더(1회) △청년(4회)

○ 지역균형 발전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통일+센터 단계적 확대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·표준화 추진

- 경기권(7월)·충청권(11월) 통일+센터 개관
- 2025년 통일+센터 운영 매뉴얼 시행(상반기), 통합홈페이지 운영 활성화(연중)
- 「통일+센터 성과평가 모델 구축 및 중장기 발전 방안」 연구용역(3월~8월) 추진
- 통일+센터 법적 성격 명확화 및 체계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(연중)

○ '광복 80주년 기념' 계기, 서울과 지방에서 통일문화행사 개최

- '광복의 완성은 통일'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한류 문화 등을 활용하여 행사 추진

□ '24년 실적

○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등 통일·대북정책 국제공조 강화

- △「북한인권국제대화」(7월)·「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」(10월) 계기 미국 방문(통일부장관) △독일 통일의날 기념식(10월) 계기 독일 방문(통일부차관) 등
- 주한공관 관계자 정책설명회(4월, 9월, 10월) 등 주한공관 소통·협력 강화

○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담론의 국제적 확산

- <8.15 통일 독트린>을 통해 '10년부터 연례 개최해 온 '한반도국제포럼(KGF)'을 「국제 한반도 포럼(GKF)」으로 확대 발전하여 창설
 - * △국내 세미나(1회/9.3. 서울) △국외 세미나(2회/6.25. 일본, 11.20. 미국)
- 한독통일정책자문위원회 개최(4.30.~5.1.), 독일 통일·통합 경험이 한반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 등 논의

○ 다변화된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인식 제고 노력

- 「해외 연구자 정책 네트워크 구축」 추진,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 형성 및 다각적 의견 교환
-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전달하고 해외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영문 웹저널 운영
- '자유를 향한 여정'이라는 주제로 미국(9월), 독일(11월) 현지 문화행사 개최, 북한인권 실상과 자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관심 환기
- 해외 한반도 전문가 활동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통일·북한문제 공론화 추진

○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한 우호적인 통일 한반도 실현 여건 조성

- 유사입장국*·글로벌 사우스** 대상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폭넓은 지지 확보
 - * (유사입장국) 한-루마니아(4.23.), 한-뉴질랜드(9.4.), 한-일(9.6.), 한-체코(9.20.), 한-슬로바키아(9.30.), 한미일(11.15.) 정상회담 등
 - ** (글로벌 사우스) 한-카자흐스탄(6.12.), 한-우즈베키스탄(6.14.), 한-필리핀(10.7.), 한-ASEAN(10.10.), 한-페루(11.16.), 한-말레이시아(11.25.) 정상회담 / 한-베트남 총리회담(7.2.) 등
- 학계 인사 및 전문가, 언론인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 대상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·공감대 확산

○ 세계 시민 대상 「글로벌 통일인식조사」 최초 실시

- * △조사대상: 8개국 9,000명 △조사기간: '24.9.~10.

□ 추진 계획

○ 통일·대북정책 국제협력 강화

- 미국 新행정부와 통일·대북정책 아웃리치 적극 실시
- 고위급 교류 중심 한독 통일협력의 모멘텀 지속 확대·강화
- EU·호주·ASEAN 등 협력대상 단계적 확대

○ 국제사회 통일 공공외교 확대

- 「국제 한반도 포럼(GKF)」을 통일 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
-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·외국시민 통일 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 전개
 - * △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△재한 외국인 청년 세미나·현장견학 △해외 「통일+센터」 설치 방안 검토 등

○ 통일업무 국제화를 위한 역량 제고

- 해외 주요 연구기관·연구자와의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·확대
- 통일 이슈의 국제적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역량 확충 추진
- 학위과정·펠로우십 등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 발굴·육성 지원

○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공감대 확산 노력

- 주요 양자·다자외교 계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·지지 제고
- 정부와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아웃리치 확대 실시를 통해 국제사회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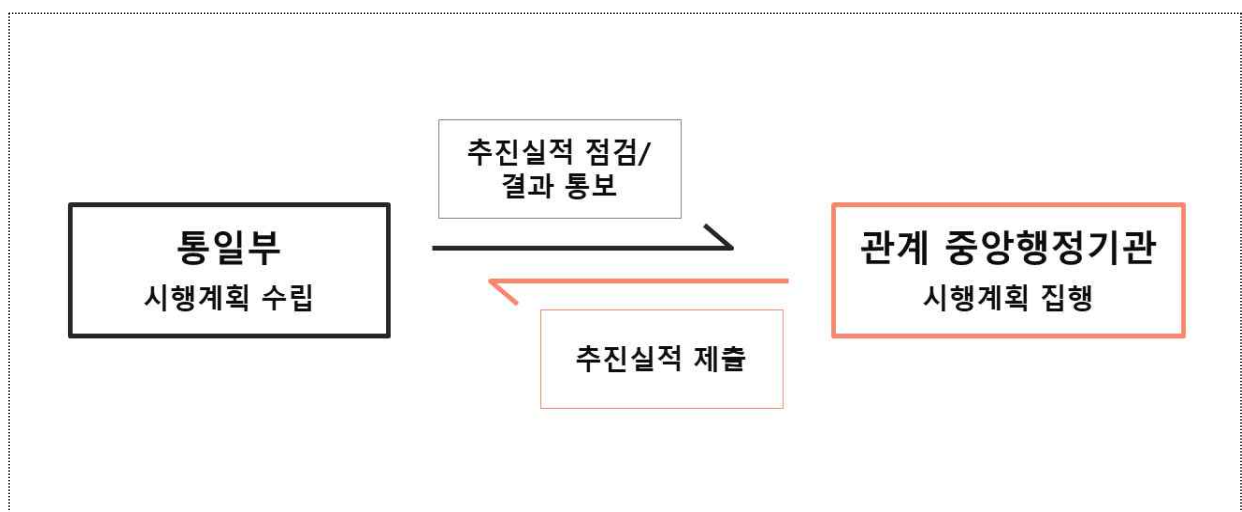
○ 「2025년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」 실시

- 기존 8개국* 일반 시민 대상 조사 지속 실시
 - * 미국, 일본, 호주, 영국, 프랑스, 독일, 폴란드, 베트남
- 주요국(미·일) 한반도 전문가 대상, 해당 국가 △조사 결과 분석 △정책적 합의 △인식제고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연계 세미나 개최

1

추진 체계

- (시행계획 집행) 시행계획 확정 후 과제별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
 -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집행, 통일부는 집행을 총괄
- (추진실적 제출)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통일부에 제출
 - 미이행 사업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책 포함
- (추진실적 점검·관리)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·관리
 -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
 -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



- 「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」 소요 자원은 남북협력기금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사용
 - 2025년도 ‘남북협력기금’은 △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, 50억 원 △남북사회문화교류, 104억 원 △인도적 문제해결, 6,015억 원 △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, 1,812억 원 등 총 7,980억 원 편성
 - * 【붙임 1】 2025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
 -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

붙임 1
202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내역

(단위 : 백만 원)

사 업 내 용		예 산
1. 통일정책		5,043
① 통일기반조성		5,043
	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	5,043
2. 남북사회문화교류		10,368
① 남북사회문화교류		10,368
	사회문화교류지원	10,368
3. 인도적 문제해결		601,523
① 이산가족 교류지원		13,408
	이산가족 교류지원	13,408
② 대북인도적지원		588,115
	구호지원	112,230
	민생협력지원	475,885
4.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		181,155
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		176,191
	경제교류협력보험	2,501
	경협기반(무상)	102,649
	경협기반(응자)	59,051
	경제교류협력대출	5,850
	DMZ 평화적 이용	6,140
② 개성공단 조성		4,964
	개성공단 운영 대출	2,819
	개성공단 기반조성	2,145
합 계		798,089

붙임 2

과제별 소관 부처(청) 현황

과 제 명		소관 부처·청
1.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	1-1.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	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
	1-2.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	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, 기재부, 과기정통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국토부, 해수부 등
	1-3.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	외교부
	1-4.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	외교부, 통일부
2.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	2-1.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	통일부
	2-2. 호혜적·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	통일부, 기재부, 과기정통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산림청, 기상청 등
	2-3.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	통일부
	2-4.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	통일부, 문체부, 방통위, 국가유산청
3.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	3-1.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	통일부, 외교부, 법무부 등
	3-2.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	통일부
	3-3. 국군포로·납북자·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	통일부, 외교부, 국방부
	3-4.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	통일부, 외교부, 농식품부, 질병청
	3-5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	통일부, 교육부, 외교부, 법무부, 지자체
4.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	4-1. 정보분석 역량 강화	통일부, 국방부
	4-2.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	통일부, 외교부, 국방부
	4-3. 북한 정보·정책 네트워크 정비	통일부, 외교부, 국방부
	4-4.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	통일부
5. 국민,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	5-1.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	통일부, 외교부
	5-2.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·제도 마련	통일부, 법무부
	5-3.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·균형적 이해 제고	통일부, 통계청, 지자체
	5-4.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·대북정책 공감대 형성	통일부, 교육부, 지자체
	5-5.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	통일부, 외교부

< 소 관 부 서 명 >

통일부 전략기획과
(02) 2100 - 5773